

 <p>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</p>  <p>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</p>	보도자료
--	------

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 개최

- ▶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분권과 교육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
- ▶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학교·교육청의 인식조사 결과 공유

-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(의장 김진경),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(회장 최교진), 한국교육과정학회(회장 소경희)는 9월 17일, 오후 2시부터 「국가교육과정, 시스템으로 혁신하다!」란 주제로 ‘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’을 개최한다.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(국가교육회의 유튜브)로 진행된다. [붙임1]
- 이번 포럼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, 교육거버넌스 구현 방안을 중심으로 기초발제와 주제를 토론회가 진행된다.

<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 개요 >

구분	1차 혁신포럼	2차 혁신포럼	3차 혁신포럼
주제	■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, 중심을 세우다!	■ 국가교육과정, 시스템으로 혁신하다!	■ (가제) 국가교육과정 개선, 평가에서 출발하다!
일시	■ '20.7.21.(화) 15:00~16:30	■ '20.9.17.(목) 14:00~16:00	■ '20.10월말
발표 & 토론	■ [토론] 초·중등교원, 교·사대 재학생 등 5명	■ [기조발제] 김진경(국가교육회의), 정영근(KICE) ■ [토론] 교원, 시도교육청 등	■ 발제 및 토론

-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“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국가문서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학교현장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”이라며, 이를 위해 “시도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성을 교원의 역량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지

원하는 전문 지원단위로 재구조화”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.

-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교육과정 발의 결정의 근거, 교과교육과정 내용의 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학교·교육청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. [붙임2]
-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“이번 포럼은 교육자치가 진전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권한 배분에 따른 각 주체들의 역할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”고 강조한다.
 - 주제를 토론회에는 교사, 교육청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교육과정 시스템, 교육과정 분권화, 교육거버넌스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다.



< 토론 발제문 >

- [주제1] 학습자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혁신이란 무엇인가?
- [주제2]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과정 분권화, 어디까지 가능한가?
- [주제3] 교육거버넌스,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?

- 문지연(서울 도선고 교사) “학생 삶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채워나가는 교육과정 만들기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”
- 송영필(대구시교육청 장학사) “국가교육과정 발의에서 고시에 이르는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”
- 유성열(세종 도담초 교사) “국가, 지역, 학교가 동등한 지위에서 교육과정 관계를 구축해야”
- 최지윤(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) “학교와 지역의 맥락 속에서 교육과정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의사결정권한과 책무성이 동시에 주어져야”
- 황현정(경기도교육청 장학사) “시도별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선제적 성찰 등 교육과정 행정을 공유하기 위해 시도단위 교육과정 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네트워킹 구축”

- 향후 제3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는 1·2차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과정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.

- 【붙임】 1.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 세부계획 1부.
2. 국가교육과정 개정·적용·평가 순환체제 관련 인식조사 주요결과 1부.

 <p>공공누리</p>	 <p>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이상돈 팀장(☎02-2100-1304), 박남정 교육연구관(☎02-2100-1317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-

붙임 1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 세부 계획

□ 추진 개요

- (주제) 국가교육과정, 시스템으로 혁신하다!
- (목적) 국가교육과정 개정체제 혁신 및 분권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
- (일시/장소) '20. 9. 17.(목) 14:00~16:00 (120') / 오운(오송역 인근)
- (진행방식)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(국가교육회의 유튜브)
- (토론) 문지연(서울 도선고 교사), 송영필(대구교육청 장학사), 유성열(세종 도담초 교사), 최지윤(전북교육청 장학관), 황현정(경기도교육청 장학사) 등 5명
- (공동주최) 국가교육회의,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, 한국교육과정학회

□ 세부 일정

시간	세부내용	비고
14:00~14:10	○ 개회사, 제1차 포럼결과 공유	
14:10~14:20 (10')	기조발제 ○ 국가교육과정, 시스템으로 혁신하다! - 김진경(국가교육회의 의장) ○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개선 방향 - 정영근(한국교육과정평가원, 정책연구책임자)	사회자(국가교육회의)
14:20~14:30 (10')		
14:30~14:50 (20')	주제토론 ① 학습자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혁신이란 무엇인가? - 국가교육과정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기획·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학습자 삶에 기반 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②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과정 분권화, 어디까지 가능한가? - 국가기준이 과도하다는 평가 속에서 국가교육과정의 일부를 시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요구가 있습니다. 교육과정을 학습자 중심으로 분권하고자 할 때, 이양범위를 결정하는 기준* 또는 원칙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울러 교육과정 분권에 따른 각 기관의 책무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* (예)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·학부모·교원들이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 ③ 교육거버넌스,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? - 거버넌스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·지방정부·학교·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장치를 의미합니다.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위해 중앙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교육청과 학교는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? 혹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	좌장 이화성(서울시교육청)
14:50~15:10 (20')		
15:10~15:30 (20')		
15:30~16:00	○ 종합 토론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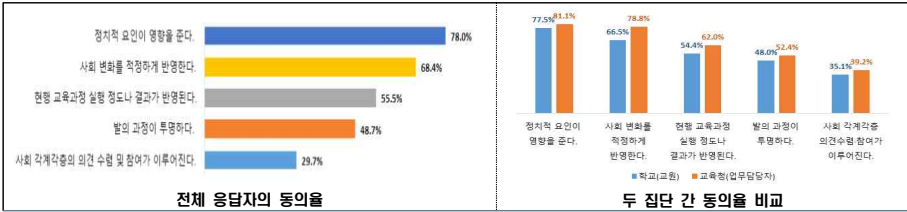
붙임 2 국가교육과정 개정·적용평가 순환체제 관련 학교 및 교육청의 인식조사 주요결과

인식조사 개요

- (조사기간/방법) 20. 7. 15.(수) ~ 8. 7.(금) / 설문조사
- (조사기관) 국가교육과정 개발·적용·평가의 순환체제 개선 연구팀(연구책임자 정영근 KICE)
- (참여대상) 학교(초·중·고교원), 교육청(업무담당자) 등 1,603명 응답
- (조사내용)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, 연구·개발, 적용, 평가 등에 대한 인식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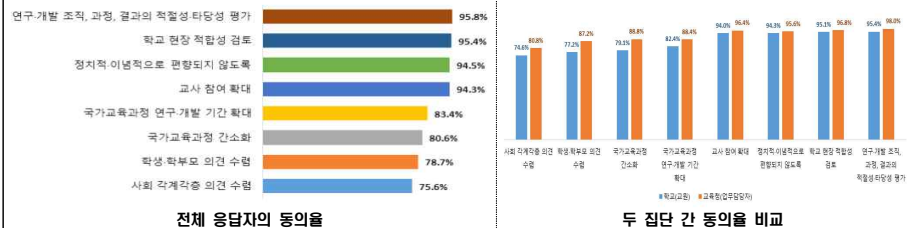
- **[개정 발의]**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에 대해 응답자의 78.0%가 정치적이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으며, △발의과정이 투명하다(48.7%), △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루어진다(29.7%)고 응답하여 발의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 국가교육과정 발의에 대한 인식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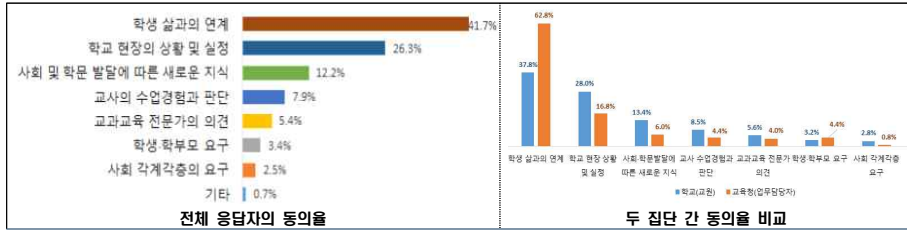
- **[연구·개발·고시·적용]**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△연구·개발 조직, 과정, 결과의 적절성·타당성 평가(95.8%), △학교현장의 적합성 검토(95.4%), △정치적·이념적 중립성 확보(94.5%)로 응답했으며, △학생·학부모 의견수렴(78.7%)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 국가교육과정 개정·개발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동의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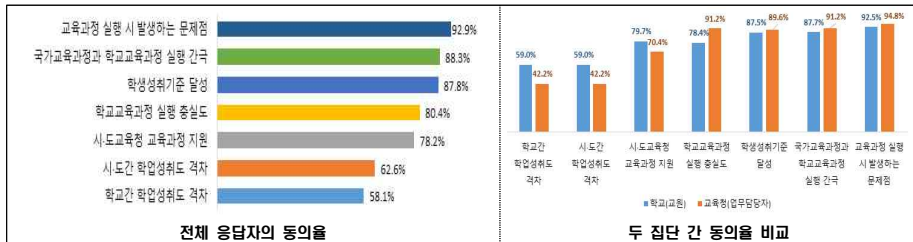
-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△학생 삶의 연계(41.7%), △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(26.3%), △사회 및 학문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(12.2%)으로 나타났다.

<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한 동의율 >



□ **[평가모니터링]** 국가교육과정 평가(모니터링)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.0%가 동의했으며, '학교 간 학업성취도 격차 [학교 59.0%, 교육청 42.2%]'와 '시도 간 학업성취도 격차 [학교 59.0%, 교육청 42.2%]'의 경우, 학교가 교육청 보다 평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< 국가교육과정을 평가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한 동의율 비교 >



- 국가교육과정을 평가(모니터링)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(85.4%)와 교육청(78.8%) 모두 교원을 평가주체 1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나, 다른 주체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학교는 교육청(28.7%), 학생(28.8%), 학부모(23.8%), 연구기관(24.0%)을 비슷한 비중의 평가주체로 인식한 반면, 교육청은 교육청(48.5%), 학생(41.1%), 학부모(32.8%), 연구기관(31.5%)으로 차이가 있었다.

< 국가교육과정을 평가(모니터링)하는 주체에 대한 동의율 비교 >

